

후속 북미회담 가능성... 종전선언 어려워지나?

뚜렷한 비핵화 합의 도출 안되면 남북미 회담 타진 불가능 한계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후속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뚜렷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후속 회담의 몫으로 남겨둘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무리하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타진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두 명의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회담을 올가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해외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첫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상응하는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방법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그것(싱가포르 회담)은 시작이다. 한 번에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의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초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이행을 견인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안전관' 성격으로 연내 종전선언 카드를 고려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 뒤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미북 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6 남북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 한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의

미있게 여겨졌다. 청와대의 입장도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가급적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월31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질지 희망한다(5월11일)"고 밝히는 등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뀌어 왔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과 외교부 관계자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전답사를 다녀온 것도 남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북미 간 정상회담 세부 의제를 조율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거듭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와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타진하는 쪽으로 가다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내달 27일 남북미 선언 방안 9월 유엔총회 3자 선언이 대안

대신 정점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3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든지 관계 없이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남관포 국가보안실 2차장을 싱가포르에 파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 남 차장이 정부 입장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남북 공동연락 추진단 오늘 개성공단 방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7일 "남과 북은 지난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6월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5일 이전에 남측 사전 점검단이 시설 상태 점검차 방북해 본사무소 개소 이전에 임시 사무소를 개소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은 지난 5일 북측에 추진단 방문 일정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에 동의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현지 점검시 북측 관계자들도 참가할 것이며, 필요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은 천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 현대아산, 현대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숙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추진단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및 임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영환 "이재명, 김부선과 15개월간 밀회... 전국민 상대 사기극"

"여배우 인격살인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하태경 "이재명은 거의 '인격 장애인' 수준 인간으로서 자격 의문"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 논란과 관련 "김씨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서울 육수동 등지에서 김씨와 밀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김씨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김씨를 모르지만 지난 경기지사 TV토론 이후 연락이 왔고 약 1시간 반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김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후보와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11일 BBK 무협회의 종교집회에서 처음 만났고, 2008년 5월17일 광주병 집회 당시에는 광화문 낙지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 후보가 김씨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주차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 3사 합동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미녀 사냥'이라고 반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뻔뻔한 표정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며 "여배우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 후보가 봉하마을로 조문하러 가는 김씨에게 '비오는 데 거길 왜 가느냐. 육수동에서 만나자'

고 했다"며 "이는 봉하에 조문가는 사람을 육수동으로 가라고 해 밀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김씨가 실제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로 김씨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김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07년 12월 인천의 한 방과제에서 자신을 직접 찍어줬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그것을 찍을 때 자신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한다. 지금 (이 후보가 찍힌) 그 사진을 찾고 있는데 (김씨가) 그걸 확인하면 (이 후보가) '사퇴하겠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이번 논란에서 문제로 보는 것은 불륜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것,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후보가 '내편'이란 이유로 집단적으로 침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 후보는 거의 '인격 장애인' 수준"이라며 "이 후보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어 임일 후보 자격을 논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든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민주당, "무소속 후보 입당 복당 허용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 무소속 단체장 후보들의 '당선 후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의 입당이나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현재 대선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타나는 마음은 알겠으나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에 이어 전북 장수, 전북 임실, 전북 부안, 전북 정읍, 전북 무주, 전남 담양 등에서 후보들의 민주당 입당설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민주당 입당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로 이뤄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혹시라도 이에 현혹돼 한 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는 유권자가 계산다면 그 마음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